

# 17세 이하 보호아동 절반 '학대' 경험

### 상대적 빈곤률 9.8%...OECD 중 낮은 편

### 자살률 6년 연속 ↑...2000년대 이후 최고치

보호대상 아동·청소년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들 중 학대를 경험하는 비중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며, 자살률도 증가 추세다.

영양결핍 비중이 늘어난 것과 동시에 비만율도 증가하고, 삶의 만족도는 부정적세가 크게 작용하며 전반적으로 악화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렀다.

통계청은 27일 발간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지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지표 보고서는 통계청이 이번에 처음 발

간한 자료다.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해 8개 영역에서 60개 지표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 보호아동 감소세지만 '학대' 원인은 급증

외국인을 포함한 0~17세 아동·청소년 인구는 올해 전체 인구의 14.1%로 해마다 감소했다. 2040년에는 10.2%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보호대상아동 발생률은 감소 추세를 보이며 아동인구 10만명당 45.9명이었다. 이는 2010년 아동인구 10만명 당 85.4명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반면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학대가 48.3%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보호대상 아동·청소년의 절반이 학대로 인해 가정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뒤로 미혼부모·혼외자 10.6%, 부모의 질병 10.4%, 비행·가출 8.5% 순이었다.

학대는 2008년 9.6% 이후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반면 미혼부모·혼외자의 경우 2008년 25.3%에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 상대적 빈곤률 OECD 중 낮은 편이지만 자살률 꾸준히 증가

아동·청소년의 상대적 빈곤률은 2020년 9.8%로 감소 추세며, OECD 국가 중에서도 중간보다 낮은 편이다.

아동·청소년이 함께 있는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비율은

2020년 2.7%로 전체 일반 가구(4.6%)보다 낮은 편이다.

최저주거기준은 사람당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조건을 정한 것으로 가평 4인 가구의 경우 주거면적 43㎡, 방 3개를 최저 기준으로 잡고 있다.

최저주거기준 중 침실기준(1~2인 방 1개, 3인 방 2개, 4~5인 방 3개, 6인 방 4개)을 미달하는 비율은 전체 일반 가구(0.2%)보다 아동·청소년 가구(0.6%)에서 더 높았다.

반면 아동·청소년 사망원인 1위인 자살률은 6년 연속 증가 추세다. 지난해 아동·청소년 자살률은 10만명당 2.7명으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2019년은 2.1명 2020년은 2.5명을 기록했다.

12~14세의 자살률은 5명으로 1년 전 3.2명에서 크게 증가했다. 15~17세는 지난해 9.5명으로 전년(9.9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뉴스

# 내년부터 '유통기한'→'소비기한으로'

### 식품 폐기량 줄고 소비자 안심 향상 기대

전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판매허용 중심의 '유통기한'이 섭취 가능 기간인 '소비기한'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식품 폐기량은 줄고 소비자안심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라면,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하면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기존의 유통기한보다 소비자 중심 표시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표시제의 시행을 앞두고 주요 식품 유형의 소비기한 참고 값을 산출, 두부는 유통기한 17일에서 소비기한 23일로 6일 가량 길어지고, 유산균

음료는 8일, 빵류는 11일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1985년부터 시행한 유통기한 표시제는 이후 38년 만에 폐지되지만 냉장보관 우유 및 환원유는 냉장 유통환경 개선 등을 위해 2030년까지 기존 유통기한을 사용, 2031년부터 소비기한을 적용한다.

또 기존 포장재 교체·폐기에 따른 비용부담 및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유통기한'이 표시된 포장재를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2023년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소비기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le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현안 기자

# 라이더, 25일 일하고 381만원 번다

### 첫 배달업 실태조사...6개월 내 10명 중 4.3명 사고

음식배달 종사자가 3년 만에 약 2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월 평균 약 25일 일하고 381만원을 번다. 이 중 보험·렌탈료로 나가는 돈이 약 95만원이었다.

국도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배달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음식서비스 배달 직종에 근무하는 배달 종사자, 지역 배달대행업체, 배달플랫폼 업체 현황과 종사자 근무여건, 소비자 서비스 이용실태 등을 다뤘다. 지난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이후 최초로 진행된 실태조사다.

종사자 수를 살펴본 결과 2019년 상반기 11만9626명에서 올해 상반기 23만7188명으로 약 2배 늘었다.

주문종개(소비자와 음식점 간 음식주문을 중개) 플랫폼 37개 업체, 배달대행(음식점과 지역 배달대행업체 간 배달주문 중개) 플랫폼 51개 업체가 운영 중이다. 지역의 배달대행업체는 전국적으로 7794곳이었다.

국도부는 배달업 근로여건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주요 6

개 도시 배달 종사자 12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벌였다.

업무를 처음 시작할 때 안전보건 교육 이수율은 79%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대부분(72.2%)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였다.

최근 6개월간 종사자 10명 중 4.3명은 교통사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고 원인으로는 ▲촉박한 배달 시간에 따른 무리한 운전(42.8%) ▲상대 운전자의 미숙 또는 부주의(41.4%) ▲배달을 많이 하기 위한 무리한 운전(32.2%)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월 평균 25.3일을 일하고 381만원을 벌면서 약 95만원을 보험료, 렌탈료 등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배달 건수는 주중 37.4건, 주말 42.3건이었다. 평균 운행거리는 주중 103km, 주말 117km로 나타났다.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배달 수수료 체계 개선(43.8%)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노동자 지위 인정(13.7%) ▲갑질 완화(12.9%) ▲위험 보상(12.5%) 등이 뒤를 이었다. /뉴스

## 2023년 순천지역

### 제조업체 경기전망 '72'

새해 지역 제조업체 체감 경기가 매우 악화될 전망이다.

순천상공회의소는 최근 관내(순천, 구례, 보성) 60개 주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도 1분기 기업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기업경기실사지수(BSI) '72'를 기록, 4분기 연속 이어오던 완만한 상승세가 반박해 다수의 업체가 새해 경기 둔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27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업체의 53.6%가 연초 계획한 매출실적 목표 수준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영업이익 또한 67.9%의 업체가 목표치에 미달할 것으로 전망했고, 목표한 경영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국내의 요인으로 가장 많은 업체가 꼽은 항목은 '원자재 가격(41.0%)'이었다.

'내수시장'과 '수출시장' 경기는 각각 20.5%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의 새해 성장률과 관련해, 조사에 응한 업체 중 44.4%가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낮춘 정부와 비슷한 1.5~2.0% 수준으로 전망했다. 이보다 낮은 1.5% 미만으로 전망하는 업체도 48.1%에 달하여, 체감하는 경제성장률은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매출 전망과 관련해 과반이 넘는 업체(55.2%)가 매출 성장이 없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 햇살론 대출한도 확대 연장

### 금리·보증료를 조정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대출한도 확대 연장, 대출금리 조정 및 금리조정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근로자햇살론(1500만원→2000만원), 햇살론15(1400만원→2000만원), 햇살론뱅크(2000만원→2500만원)의 한도 확대 적용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이와 함께 서민원은 금융회사의 조달금리 상승을 고려해 일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대출금리를 조정하고, 대출금리 조정에 따른 차주의 부담을 서민원이 분담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면서, 서민·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 '2022 산타원정대' 실시 현대자동차 복지관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의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는 프로그램인 '2022 산타원정대'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지원 대상을 32개 복지기관 1천200여 명으로 확대하고, 약 1억7000만 원 상당의 선물 및 크리스마스 파티 지원금을 후원했다. /현대자동차 제공

# 이번엔 빌라 수습채 보유 20대 송모씨 사망...피해자 속출

### 피해자들 "임대인 송씨 사망후 부모·동생도 연락두절"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다 숨겨 임차인 피해가 발생한 '빌라왕' 유사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수습채를 보유하던 20대 송모씨가 사망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정부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들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에 갭투자를 통해 빌라와 오피스텔 수습채를 보유하던 송모(27)씨가 지난 12일 사망했다.

송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빌라와 오피스텔 60여채를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보유한 주택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50여채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는 임대차 계약 후 1개월 뒤 쯤 임대인이 변경된 사실을 알

게 됐다. 바뀐 새 집주인이 20대 송모씨였다. 평소에 연락이 잘 닿지 않자 내년 1월 만기에 맞춰 나가겠다는 내용의 계약갱신거절 문자를 지난 7월 보냈다. 지난달에는 만기도래를 앞두고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문의했고 송씨로부터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런데 최근 보일러 고장으로 송씨에게 수리를 요청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지난 19일에는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 불안한 마음에 중개를 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를 들었다. 송씨가 지난 12일 사망했다는 것이었다.

임차인들에 따르면 임대인 송씨의 부모와 동생 모두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임대인 송씨가 사망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들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

전세계약 해지확인서를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데 송씨의 사망으로 해지확인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피해자 A씨는 이날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임대인이 전화를 받지 않아 지난 19일 계약한 부동산에 연락했는데 담당자는 퇴사했고, 임대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다"며 "임대인의 집을 찾아 갔으나 응답은 없고 고지서 30장이 쌓여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만기가 끝나면 전에 신용불량자 될 상황이었고 정신적 피해로 정상적인 생활도 할 수도 없다"며 "허그는 상속자를 찾아야 한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빌라왕' 김모씨가 보유한 주택의 임차인들도 614명이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대부분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139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차전지·반도체 설비 0% 할당관세...LNG 겨울철 무관세

### 101개 품목 관세율 인하...1조748억원 지원

내년에 이차전지·반도체 등 미래 산업과 관련된 원재료와 설비 등을 수입할 때 무관세가 적용된다.

역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는 동결기 동안 관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탄력관

세 운용계획'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운용계획에는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이 담겼다.

정부는 내년 101개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할당관세)하기로 했다. 품목은 지난해 83개보다 18개 늘었다. /뉴스

할당관세 품목은 2018년 69개를 시작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원액(추정)은 전년(7156억원)보다 3592억원 늘어난 1조748억원으로 추산된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 안정, 세율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의 40%포인트(p) 범위에서 적용된다. 내년 할당 관세 품목은 2012년(103개) 이래 11년 만에 최다 규모다. /뉴스

# 켄텍, 액화 수소 핵심 인프라 구축 협약

### 보령시 액화 수소 연구소 설립 통한 수소 사회 실현 기대



한국에너지공단(KENTECH)가 27일 보령시, 한국중부발전(주), SK E&S(주)와 액화 수소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충남 보령시청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보령시 김동일 시장, 한국중부발전 김호민 사장, SK E&S 전경문 부사장, 한국에너지공단 윤의준 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에너지공대는 세계 최대 규모 블루 수소 밸류체인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인 충남 보령시와 보령 액화 수소 연구소 설립 및 지속 가능한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액화 수소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며, 핵심 수소기술의 공급과 이송, 수요와 연계된 R&D 추진과 인력양성을 추진한다.

보령시는 액화 수소 LAB 구축을 위한 전문영역과 단계별 인허가를

지원할 예정이며, 한국중부발전과 SK E&S는 수소 공급,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수소 LAB 설립 지원, 인력 양성, 기업 기술이전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한국에너지공대와 보령시는 액화 수소 연구소 설립 타당성 용역을 통해 2024년 12월까지 보령시 일원에 관리 운영센터, 안전관리센터, 액화 수소 전문 연구기관(LAB) 등 보령시 액화 수소 연구소 설립과 액화 수소 핵심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황지현 교수는 "수소 사회 실현에 필수적인 수소액화 기술은 안정성과 사회 수용성이 우수하나 기술 장벽이 높다는 한계가 있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유럽, 미국의 일부 기업 독점하고 있는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기호 기자